<R&D매니지먼트 동향 브리프: 26-08> 사단법인 한국알앤디매니지먼트협회(2026.11.17.)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미 상원 FY2027 R&D 예산안 분석

□ **미 의회 권력 지형 재편**: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탈환함에 따라, 제120대 의회(2027년 1월 출범)에서는 지난 2년간 지속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R&D 예산 삭감 및 거버넌스 개편 드라이브에 강력한 견제가 가해질 전망. 다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공격적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연구 생태계 보호 및 간접비·과제관리 규제 방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큼.

□ **미 상원 FY2027 세출법안 초안 공개**: 상원 세출위원회(공화당 주도 레임덕 회기 중 공개)는 12개 세출법안 중 과학기술 관련 4개 핵심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백악관의 대폭 삭감안(NSF 55% 삭감 등)을 거부하고 FY2026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 특히 대학 연구비의 핵심인 간접비(Indirect Cost) 요율 현행 유지를 명문화함.

주요 출처: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3579-x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researchers-have-wish-list-can-new-congress-deliver
https://lofgren.house.gov/media/press-releases/ranking-member-lofgren-announces-she-will-seek-chair-house-science-committee

1. 미 의회 권력 지형 변화

가. 20년 만의 '여소야대(민주당 양원 장악)' 도래와 그 한계

○ **선거 결과**: 202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은 하원(435석 중 최소 255석)과 상원(100석 중 55석)의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며, 2006년 이후 20년 만에 공화당 행정부 하에서 양원을 모두 장악하게 됨.

○ **견제와 균형의 역학**: 2027년 1월 의회 개원 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교체, 청문회 소집권 및 소환권 확보를 통해 행정부의 연구비 중단 및 기관 인력 감축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됨.

- 그러나 상·하원 모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에는 미달하므로,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뒤집거나 대규모 신규 R&D 예산을 단독 입법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나. 주요 과학기술 상임위 리더십 교체 및 과학자 출신 의원 약진

○ **상임위 위원장 교체**: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Zoe Lofgren), 상원 세출위원회(Patty Murray), 상원 상무위원회(Maria Cantwell),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Bernie Sanders) 등 R&D 예산 및 정책 핵심 상임위 수장이 친(親)과학 성향 인사로 교체 예정

○ **이공계·의료계 출신 의원의 대거 입성**: 친과학 정치행동위원회(314 Action)의 역대 최대 규모(3,000만 달러) 지원에 힘입어 하원 내 친과학 코커스(Caucus)[1]가 기존 21명에서 35명으로 확대

- 상원에서도 역학자 출신 Abdul El-Sayed(미시간)와 소아과 의사 Annie Andrews(사우스캐롤라이나)가 당선되는 등 의회 내 과학적 전문성이 대폭 강화됨.

* 주요 예시: 블랙 코커스(CBC, 흑인 의원 모임), 히스패닉 코커스(CHC), 그리고 R&D 분야의 '국립보건원(NIH) 코커스', '대학 연구 코커스(University Research Caucus)' 등이 대표적

2. 미 의회 감독(Oversight) 강화 및 주요 쟁점 분석

가. 행정부의 R&D 거버넌스 개편 시도에 대한 의회 견제

○ **OMB 연구비 지원 규정(UGR) 및 정치적 개입 차단**: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Russell Vought가 주도해 온 '동료평가 대신 정치적 임명직이 연구비 지원을 통제하는 규칙(Grantmaking Rule)'과 대학 간접비(Indirect Cost) 상한 설정 시도가 의회 청문회 및 예산안 부대조건을 통해 정면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

○ **기관장 인준 지연 및 공백 장기화**: 2025년 4월 이후 공석인 국립과학재단(NSF) 총재직의 경우, 백악관이 지명한 James O'Neill 후보자에 대한 상원 HELP 위원회 표결(11월 18일 예정)이 연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2027년 1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이후 지명 절차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나. 연말 셧다운(Shutdown) 시한과 임시예산안(CR) 전략

○ **12월 11일 데드라인**: 현재 연방정부는 12월 11일까지 유효한 임시예산안(CR) 하에서 운영 중이며, 동 임시예산안은 OMB의 신규 연구비 규정 시행과 대학 간접비 삭감을 일시 동결하고 있음..

---

1) 공식적인 상임위원회(Committee)와 달리,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 배경, 정책 목표를 가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공식 조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연구단체'나 '포럼'과 성격이 유사하다.

○ **민주당의 예산 전략**: 차기 민주당 세출 지도부는 12월 11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시예산안을 내년 3~4월까지 연장한 뒤, 양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2027년 초에 FY2027 본예산 협상을 마무리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할 계획

3. 미 상원 세출위원회 FY2027 과학기술 예산안 분석

○ 상원 세출위원회가 레임덕 회기 중 공개한 FY2027 세출법안 초안은 백악관의 급진적 삭감안은 물론 하원 통과안보다도 훨씬 우호적인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민주당 측은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내년 전면 재협상을 예고함.

가. 주요 연방 R&D 기관별 FY2027 예산안 비교 (FY2026 확정액 대비)

소관 법안 및 기관/프로그램	백악관 예산요구안	하원 세출위/본회의안	상원 세출위 초안 (공화당)
국립과학재단 (NSF)	-55% 삭감	$70.0억 (-20%)	$88.3억 (+0.9%)
항공우주국 (NASA) 과학계정	-46% 삭감	-17% 삭감	$74.3억 (+2.5%)
해양대기청 (NOAA)	-28% 삭감	$58.5억 (-5%)	$62.5억 (+1.3%)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54% 삭감	$13.0억 (-30%)	$16.8억 (-9.0%)
에너지부 (DOE) 과학실	$71.0억 (-13.5%)	$85.0억 (+3.3%)	$84.0억 (+1.8%)
에너지첨단연구계획원 (ARPA-E)	$2.0억 (-43%)	$3.0억 (-14%)	$3.5억 (동결)
환경보호청 (EPA) S&T 계정	-32% 삭감	-29% 삭감	$7.24억 (-2.7%)
농무부 농업연구청 (ARS)	$17.0억 (-8.3%)	$18.1억 (-2%)	$18.8억 (+1.5%)

주. (주: 국립보건원(NIH)을 포함하는 노동·보건복지(Labor-HHS) 세출법안은 미공개 상태이며, 백악관은 앞서 NIH 예산 12% 삭감을 요구한 바 있음)

나. 연구행정 관점의 핵심 정책 조항 (Policy Riders)

○ **대학 간접비(Indirect Cost) 요율 보호**: 상무·법무·과학(CJS) 및 에너지·수자원 세출법안은 NSF, NASA, 상무부, DOE가 FY2024에 적용되던 협상 간접비 요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요율 변경을 위한 예산 집행을 금지함.

○ **의회 승인 없는 조직·예산 임의 변경 경고**: 상원 세출위는 NSF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연구국(Directorate)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 향후 세출법안에서 연구국별 세부 예산 한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임을 경고함.

○ **OMB 연구비 규정(Grantmaking Rule) 처리 보류**: 금번 상원 초안에는 OMB의 연방 연구비 지원 규칙 개정을 영구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12월 11일 임시예산안 만료 시점에 맞춘 후속 입법 대응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함.